

비상경제장관회의

23-28-4

(공개)

##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

2023. 12. 5.

관계부처 합동

#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[요약]

## 1. 추진배경

- 정부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, 구매목표비율 제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

\* 중소기업제품 구매액(조원) : ('20) 116.3 → ('21) 119.7 → ('22) 118.9

- 그간 지속적인 제도 개선\*에도 불구하고, 여러 부문에서 문제점 노출

\* 특정 기업군 쏠림 방지, 생산시설 없는 기업 참여 허용, 직접생산 확인 공정성 강화 등

-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참여를 위한 제도 ①일부 기준이 경제환경 변화에 미부합하며, ②중복 검사 및 제재로 중소기업의 부담 발생

\* 예) '매트리스' 제품 직접생산기준은 스프링 기반으로 공기주입식 매트리스 생산업체 참여 곤란

-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에 ③대기업·해외기업 제품이 포함되고, 중소기업이 ④해외산 부품을 단순 조립하는 등 부품 생산·투자가 미흡

## 2. 개선방향

-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, 非중소기업 제품 배제, 신제품 구매 및 참여기회 확대, 핵심부품의 국산화 유도 등 실효성 제고를 추진하고 투자 확충도 유도

## 3. 세부 추진과제

### ① (전략 1) 공공구매시장 참여 중소기업 부담 완화

- (직접생산확인 면제) 유사 형태의 법정인증(HACCP 등)을 받은 경우, 중기간 경쟁시장 참여를 위해 필수적인 '직접생산 확인' 생략('24.上)

\* '24년 상반기 중 생략 가능한 법정인증 조사 및 확정

- (조사·제재 합리화) 중기부 직접생산 조사 및 공공기관 등 품질조사를 합동으로 추진하고,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참여 제한을 합리화\*

\* 예시 : 동일 사안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참여 제한을 받은 경우, 중기간 경쟁 제품 참여 제한은 해당 기간만큼 감경 추진

## ② (전략 2)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효성 제고

- (非중소기업 제품 실태조사) 중기제품 구매 공공기관(856개) 대상으로 '유통 중소기업'에 의한 대기업·해외제품 구매 현황 조사('23.12)
  - 향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는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한정하는 방안 검토·추진(판로지원법 개정)
- \* 단순히 대기업제품 혹은 해외제품을 납품하는 경우는 구매실적에서 제외
- (공공기관 점검 강화)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사후 점검·제재를 지속하고, 미달성 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 추진
- (성과 중심 경쟁제품 지정) 성과분석(부가가치, 매출 등)을 통해 지정 효과가 낮은 경우 경쟁제품 지정을 제외하는 방안 마련('24)
- (의존기업 민수시장 진출유도) 중기간 경쟁시장 의존기업\* 현황 분석을 추진하고, 의존기업의 민수시장 진출 유도 추진('24, 연구용역)

\* 예시 : 중기간 경쟁시장 진출 3년 경과 후에도 매출의 90%가 공공기관 납품에서 발생하는 기업, 6년 경과 후에 매출의 60% 이상이 공공기관 납품에서 발생하는 기업 등

## ③ (전략 3) 신제품의 공공구매시장 참여기회 확대

- (직접생산기준 현행화) 신기술 적용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식·진부화된 중기간 경쟁제품(631개) 기준을 주기적 조사·개정('24~)
- (신제품 지정 확대) 중기간 경쟁제품에 다양한 신산업 제품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추천 단체를 확대\*하고, 신제품에 대해서는 지정요건 완화\*\* 추진

\* (현행) 중기중앙회 단독 → (개선)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단체 추가(총 7개)

\*\* (현행 신제품 특례) 제품생산기업 5개 이상 & 구매실적 5억원 이상 → (개선) 5개 & 1억원 이상

- (공공기관 구매가능성 제고) 공공구매망\*을 활용, 공공기관 수요에 맞는 신제품 발굴·매칭 및 실증 비용을 지원, 공공기관의 적극적 구매 유도

\* 공공구매망(SMPP) : 공공기관별 입찰정보 및 중소기업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

- (조달 참여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) 공공구매론\* 참여은행과 기술보증기금 협약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납품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보증 프로그램 신설

\* 공공구매론 : 공공구매 계약업체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은행에서 계약금액의 80%까지 대출하고, 납품 후 공공기관이 결제할 대금으로 대출은행에 상환하는 방식

#### 4 (전략 4) 핵심부품의 국산제품 사용 유도

- (시범제품 도출) 수입산 핵심부품 사용 비중이 높은 중기간 경쟁제품 중 국산 부품 사용 가능 제품\*을 선별, '부품 국산화 대상 제품' 공고('23.12)

\* 예 : 드론, 영상감시장치, LED 실내조명등, 3D 프린터, 원격자동검침시스템 등

- (인센티브) 국산 부품 사용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입찰 시 가점 부여, 직접생산 확인 생략 및 성능인증 평가우대 등\*을 통해 자발적 참여 유인

\* 계약이행능력심사 최대 가점(3점), 직접생산 현장조사 생략, 성능인증 가점(3~5점) 부여

- (국산제품 공공구매 확산) 공공기관 평가반영·포상 및 입찰평가기준 개정을 통한 국산품 우선구매를 유도하고, 경쟁제품 신규자정시 국산부품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\*('24.7)

\*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국내산 원산지증명서(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임을 확인) 제출 조건 포함 등

- (직접생산 확인 방식 변경 검토) 직접생산 여부를 기존 시설·공정 등 형식 요건 확인에서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일정비율 이상 창출하는 조건으로 변경\* 검토

\* 경쟁제품별 부가가치 비율을 산정하고 '부가가치 확인서'를 발급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

## 순 서

I. 추진배경 .....	1
II. 현황 및 문제점 .....	2
III. 개선방향 .....	4
IV. 세부 추진과제 .....	5
1. 공공구매시장 참여 중소기업 부담 완화 .....	5
2.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효성 제고 .....	6
3. 신제품의 공공구매시장 참여기회 확대 .....	7
4. 핵심부품의 국산제품 사용 유도 .....	8
V. 향후 추진계획 .....	10

## I. 추진배경

- 정부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, 구매목표비율\* 제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
  - \* 구매목표 : 중기제품 50% 이상, 기술개발제품 15% 이상, 창업기업제품 8% 이상 등
  - 119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구매력을 이용,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 판로 확보 및 경영 안정을 도모
    - \* 중소기업제품 구매액(조원) : ('20) 116.3 → ('21) 119.7 → ('22) 118.9
  - 또한 26.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하는 시장(중기간 경쟁제품)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
    - \*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(조원) : ('20) 21.9 → ('21) 24.2 → ('22) 26.4
- 그간 중기간 경쟁시장에서 특정기업 쏠림을 방지하고, 생산시설 없는 혁신기업 참여와 국산부품 사용도 제고 및 직접생산 공정성 강화 등 제도 개선에 노력
  - 중기간 경쟁제품 중 독과점 유의품목을 지정하여 참여를 제한\*하여 특정기업 구매 쏠림 방지 추진 ('21년; 화장로, 국술, 향온향습기 등 6개)
  - 생산시설이 없어도 기술력 갖춘 혁신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, 국내 부품·소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핵심부품 국산화 유도 ('20년, 상생협력제도)
  - 또한 중기조합은 非회원사의 직접생산 여부만 조사하고, 조합 회원사는 민간전문가 조사로 이원화하여 공정성 제고 ('22년)
- 그러나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, 여러 부문에서 문제점 노출
  -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참여를 위한 제도 일부 기준이 경제환경 변화에 미부합\*하며, 중복 검사 및 제재로 중소기업의 부담 발생
    - \* 예) '매트리스' 제품 직접생산기준은 스프링 기반으로 공기주입식 매트리스 생산업체 참여 곤란
  -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에 대기업·해외기업 제품이 포함되고, 중소기업이 해외산 부품을 단순 조립하여 납품하는 사례도 발생

☞ 중소기업의 참여 부담 완화, 非 중소기업 제품 배제, 신제품 구매 및 참여기회 확대, 핵심부품의 국산화 유도 등 제도 실효성 제고를 추진

## Ⅱ. 현황 및 문제점

### 1. 현황

□ '22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금액은 총 118.9조원(총 구매액의 75.7%)

- '22년 총구매액은 '21년 대비 2.8조원 증가(154.2 → 157.0, 1.8% 증가) 하였으나,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0.8조원 감소(119.7 → 118.9, 0.7% 감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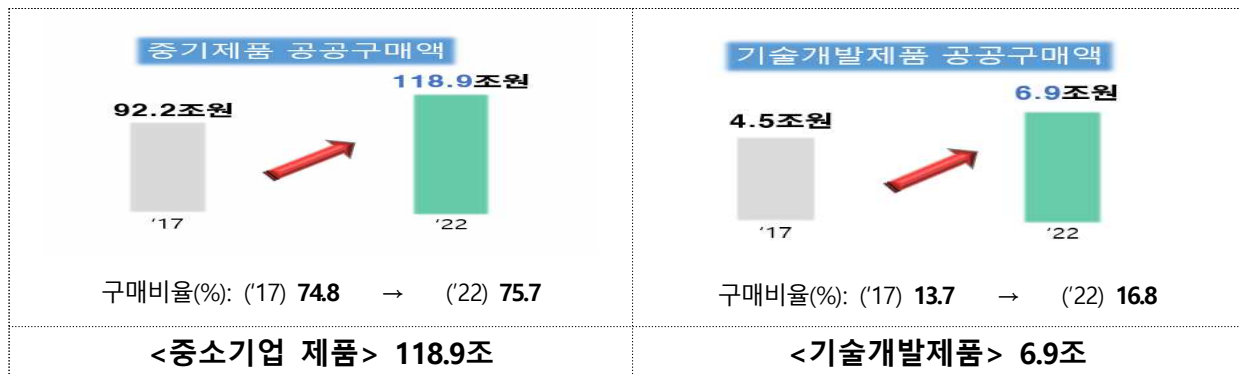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조원, %)

구 분	'22년	'21년	'20년	'21~'22 증감율(%)
◦ 총 구매액(A)	157.0	154.2	145.7	1.8
◦ 중기제품 구매액(B)	118.9	119.7	116.3	△0.7
◦ B/A(%)	75.7	77.6	79.8	-

\* '22년 중기제품 구매액 감소는 질병관리청의 방역제품 구매액 급감('21년보다 2.8조원 ↓) 때문

- 중기제품 구매는 '17년 대비 '22년에 26.7조원이 증가(29% 증가), 특히 기술개발제품\*은 24조원 증가(53% 증가)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에 기여

\* 성능인증제품, 신기술인증제품(NET), 혁신제품 등 총 13종('22년 기준)



□ 최근 제도 개편 내용

- (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)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 비율 상향 ('16 : 10% → '21 : 15%)
- (창업기업제품 의무구매) 창업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창업 기업제품 구매목표제 의무화 (8%, '20 : 신설 → '22 : 의무화)

## 2. 문제점

### ① 공공조달시장에서 중복 실태조사 및 처분으로 부담 가중

- 유사 형태의 법정인증(HACCP 등)을 받은 기업도 중기간 경쟁시장 참여 시 다시 현장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 호소
- 타 부처·기관 처분 시점과 집행방식의 차이\*로 상당 기간 경과 후에 추가·중복 제재를 받게 됨에 따라 공공기관 납품 시 애로 발생

\* 공정위 등 타 기관의 제재 결정 이후 중기부가 그 결과를 통보받고 별도 처분절차 진행

### ② 중기제품 구매 실적 불일치 및 非중소기업 제품 포함

-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내역에 유통 중소기업이 납품한 대기업·해외제품 등 非중소기업 제품이 포함
- 공공기관 평가(행안부 등) 자료와 중기제품 구매실적 자료(중기부)가 불일치하는 공공기관이 존재

\* 공공기관 실태조사시 허위로 자료제출한 2개 기관에 과태료 각 300만원 부과 처분('23.상)

### ③ 기술개발 신제품 공공구매 미흡

- 기존 기술·공정방식에 따라 작성된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기준과 다른 신기술 적용 혁신기업은 기준 충족을 못해 공공시장 진출에 애로
- 3년마다 지정되는 경쟁제품 다수가 반복 지정\*되는 반면 신제품 신규 지정은 제한적이며, 추천기관도 중기중앙회만 참여

\* 경쟁제품 재지정 비율 : ('13) 78%→('16) 88.9%→('19) 94.3%→('22) 90.8%

- 공공기관 수요에 맞는 혁신제품을 쉽게 찾기 어렵고, 발굴 이후에도 납품이력 부족 등 신뢰성 검증 어려움으로 여전히 적극적 구매에 한계

### ④ 핵심 부품을 수입산 사용하여 단순 조립 후 납품

- 경쟁제품 직접생산기준 상 주요 부품·소재의 원산지 제한이 없어 일부 제품은 다수 기업들이 수입산 부품·소재를 단순 조립하여 납품
- 경쟁제품 신규 지정 시 및 지정 이후 수입산 부품 사용 현황 조사 및 국내 부가가치 창출 효과 등에 대한 분석 및 개선안 도출 미비



### Ⅲ. 개선 방향

## 공공구매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



#### 문 제 점

- 법정인증을 보유한 중소기업도 직접생산 확인 중복 조사
- 동일 위반행위 건, 타부처 처분 후 판로지원법에서 재처분



#### 중소기업 부담 완화

#### 개 선 과 제

- 유사 법정인증 보유기업 직접생산확인 조사 생략
- 타부처가 기 처분한 제재 기간은 감경 조치

- 중기제품 구매실적에 유통중기가 납품한 非중소기업제품 포함
-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자료 불일치 발생



#### 구매 실효성 제고

- 非중소기업 제품 실태조사 및 중소기업 생산 제품 구매
- 구매실적 점검 강화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강화

- 직접생산기준 진부화
- 신제품 지정 미흡
- 신제품 발굴·검증 어려움



#### 신제품 참여기회 확대

- 직접생산기준 개정·최신화
- 다양한 신제품을 지정
- 신제품 발굴 및 실증 지원

- 수입 부품 단순 조립 후 납품
- 국산화 우대조치 미흡
- 경쟁제품 지정시 국내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고려·분석 미흡



#### 국산부품 사용 유도

- 부품 국산화 대상 제품 도출
- 국산화 참여 기업·공공기관 우대
- 국내 부가가치 창출효과 등 조사, 중요 경쟁제품 부품 국산화 추진

## IV. 세부 추진과제

### 1 공공구매시장 참여 중소기업 부담 완화

#### ① 직접생산 기준 개정을 통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

- 유사 형태의 법정인증(HACCP 등)을 보유한 경우, 중기간 경쟁시장 참여를 위해 필수적인 '직접생산 확인 현장실태 조사'를 생략('24.上)
- \* 경쟁제품별 직접생산 확인 기준과 유사한 법정인증 조사(~'24.上)  
→ 유사한 법정인증 보유기업은 현장조사 생략토록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정('24)

#### ② 중소기업 중복 조사 통합 및 이중 제재 처분 감경

- 납품 중소기업에 대한 유사한 사후관리 성격인 중기부 직접생산조사 및 공공기관 등 품질조사를 합동으로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('24)  
\* (현행) 납품중소기업 일부 대상으로 중기부공공기관이 직접생산 준수 여부를 각각 조사 → (개선) 기관 간 조사 계획·결과를 공유, 중복 조사 차단 및 신속 조치(필요시 합동 조사)
- 동일 위반 전으로 타 법과 판로지원법의 입찰 참여 제한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 추진('24.上)  
\* 동일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, 해당 기간만큼 판로법에 따른 제재 기간 산정 시 감경

#### ③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선정 평가 단계·기간 단축

-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\* 유효기간을 연장(3→4년)하여 성능이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에 안정적 판로 제공(판로지원법 개정, '24)  
\*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 충분한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·증명하는 제도
- 공공조달 상생협력제품 선정 평가 절차를 단축\*하고, 기술개발제품 중 시범구매제품 선정 평가기간 단축(4개월→2개월 이내)('23.12)  
\* (현행) 서류, 대면, 현장, 심의 (4단계) → (개선) 서류, 대면, 심의 (3단계)

### ① 非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태조사 및 중소기업 생산 제품 구매 강화

- 중기제품 구매 공공기관(856개) 대상으로 '유통 중소기업'에 의한 대기업·해외제품 등 非중소기업 제품 구매 현황을 조사('23.12)
-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 검토(판로법 개정)

\* 판로법 제2조에 정의 신설 : "중소기업제품"이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.

###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확인 강화 및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기관 제재

-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실태조사를 강화하고, 실제 구매금액보다 부풀려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강화('24.上)
-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(50%) 미달성 기관을 조사\*하여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사전협의 미실시 기관에 대해서는 대외 공표 및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 집중 관리 추진('24.上)

\* 사전협의 없이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목표 미달성 공공기관(질병관리청, 원자력 연구원 등 13개) 및 창업기업제품 등 의무구매목표 미달 기관을 집중 조사

### ③ 중기간 경쟁제도 성과분석 및 의존기업 민수시장 진출유도

- <sup>631개</sup> 경쟁제품 별로 국내 부가가치 창출, 매출·고용 증감, 경쟁력 수준, 특정기업 독과점 현황 등 중기간 경쟁제도 전반적인 성과분석 추진('24)
  - 성과분석 결과 경쟁제품 지정 효과가 낮은 경우\*, 차기 경쟁제품 지정 시 제외하거나 보완 방안 시행 조건부로 지정하는 방안 마련
- 중기간 경쟁시장 의존기업\* 현황 분석을 추진하고, 의존기업의 민수시장 진출 유도 추진('24, 연구용역)

\* 예시 : 중기간 경쟁시장 진출 3년 경과 후에도 매출의 90%가 공공기관 납품에서 발생하는 기업, 6년 경과 후에 매출의 60% 이상이 공공기관 납품에서 발생하는 기업 등

### ① 직접생산 확인기준 정비를 통한 신기술 제품의 진입 촉진

- 경쟁제품 직접생산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, 신기술 적용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식·진부화된 기준은 개정·최신화
  - \* (주)앤셀은 공기 주입식 매트리스로 23년 CES 혁신상을 받았으나, 현행 직접생산 기준이 스프링 매트리스만 규정하고 있어 조달시장 진입에 애로
- 기준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기술 혁신제품으로서 기존 생산시설이 불필요하다고 확인되는 경우, 직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
- 중기간 경쟁제품에 다양한 신산업 제품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추천 단체를 확대\* ('24.上)
  - \* (현행) 중기중앙회 단독 → (개선)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추가(총 7개)
-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시 신제품에 대해서는 지정요건 완화\* 추진 ('24.上)
  - \* (현행 신제품 특례) 제품생산기업 5개 이상 & 구매실적 5억원 이상 → (개선) 5개 & 1억원 이상

### ② 공공기관 수요에 맞는 신제품 발굴·매칭 및 실증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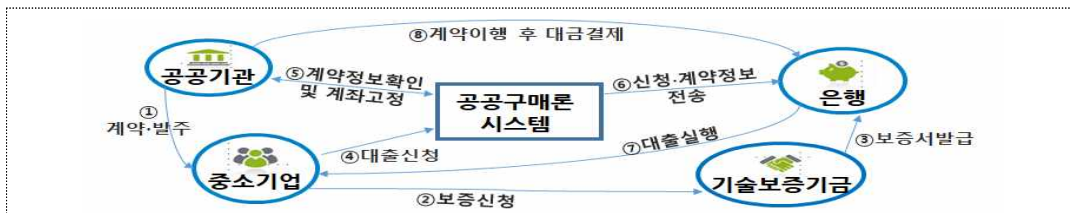
- 공공구매망\*을 활용, 공공기관 수요에 맞는 신제품을 발굴·매칭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공기관의 신제품 구매를 독려 ('23.12)
  - \* (현행) 공공기관별 구매(입찰) 정보 및 중소기업제품 정보 제공 → (개편) 중소기업 기술개발 신제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신제품 수요 정보를 추가하고 발굴·매칭 지원
- 지역별로 공공 수요와 혁신기업 제품을 연계하는 설명회·구매상담회를 개최하고, (미충족)공공 수요·성공사례 등을 공공구매망에 공유
- 신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서 실증\*할 수 있도록 소요비용 등을 지원하고, 실증 결과를 공개하여 유사 수요 공공기관의 추가 구매 유인 ('24)
  - \* 예) 장성군은 산간벽지 노인 돌봄 가능한 신제품 활용 희망 → 중기부, (주)렛츠온의 '노인케어 관제시스템' 소개 → 장성군 시범구매 및 실증 → 홍성군 및 동서발전에서 추가 구매
-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(혁신제품 등 16종)와 실증사업을 연계, 효과성 제고

### ③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 강화

- 공공구매론\* 참여은행(6곳)과 기술보증기금 간 협약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납품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보증 프로그램 신설 (24)

\* 공공구매론 : 공공구매 계약업체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은행에서 계약금액의 80% 까지 대출하고, 납품 후 공공기관이 결제할 대금으로 대출은행에 상환하는 방식(22 613억원)

#### < 공공구매론 정책보증 프로그램 >



## 4 핵심부품의 국산제품 사용 유도

### ① 부품 국산화 대상 제품 발굴 및 공고

-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전후방 파급효과를 위해 핵심 부품의 국내산 활용이 중요한 경쟁제품을 발굴 (23.12)

- 수입산 핵심 부품 사용 비중이 높은 경쟁제품 현황, 국내 대체 부품(업체) 현황 및 가격·산업 경쟁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, 국산 부품으로 대체하여 생산이 가능하고 산업 육성이 필요한 경쟁제품을 선별\*

\* 예 : 영상감시장치, LED 실내조명등, 3D 프린터,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등

- 이들을 “(가칭)핵심 부품 국산화 대상 경쟁제품”으로 공시하고, 관련 정보 안내\*, 공공기관 구매 매칭 및 인센티브 제공

\* 경쟁제품별 핵심·주요 부품 내역 및 국내 대체 부품 생산업체 현황 등

### ② 부품 국산화 기업 인센티브 제공

- 공공기관에서 경쟁제품 구매 입찰 심사 시에 가점을 부여하고, 직접생산 확인 간소화 추진

\* 국내에서 제조하고 국내 발생 부가가치가 51% 이상임을 증명하는 국내산 원산지 증명서(대한상의) 제출시,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최대 가점 3점 부여 및 직접생산 현장조사 생략

-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가능한 ‘성능인증’ 신청 시 평가 우대
  - \* 적합성 평가 항목에서 국산화 대체 정도에 따라 가점(3~5점) 부여
- 부품 국산화 대상 경쟁제품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에게는 기술력·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\*하고, 완제품 납품기업과의 협업 강화\*\*('24.上)
  - \* R&D, 정책자금, 스마트공장 등
  - \*\* 공동 R&D, 상생협력조달 지원 및 공공구매망에 핵심 부품 생산기업 정보 제공

### ③ 부품 국산화 제품의 공공구매 확산 유인

- 국산화 제품 구매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\*하고, 우수 기관·담당자 포상
  - \* 예 : 중기제품 구매실적에 2배로 인정, 동반성장평가 가점항목 신설 등
- 공공조달 입찰 심사 시 부품 국산화 경쟁제품을 우선 심사·구매할 수 있도록 <sup>신인도</sup>한도 외 가점\* 부여 등 평가기준 개선 ('24.下)
  - \* 현행 계약이행능력(적격) 심사는 일정 가격 수준(낙찰하한가) 이상으로 입찰한 기업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우선 심사하는 방식이며, “한도 외 가점”을 받은 업체는 낙찰하한가가 낮아져 다른 입찰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 가능
- 경쟁제품 신규 지정 시('25~'27년 적용) 수입산 핵심부품 사용비중 및 대체가능성, 국내 부가가치 창출효과 등을 조사하여 국산부품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('24.下)
  - 관계 부처에서 국내 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, 공급망 확보 및 보안상 목적 등으로 국산화가 필요한 경쟁제품을 추천\*
    - \* 드론(국토부), 영상감시장치(국정원), 3D 프린터(과기부), LED(산업부) 등
  - 추천 제품은 원산지 중점관리품목으로 검토·지정(조달청)하고, 국산 핵심부품을 포함한 국내산 원산지 증명 의무화 등 실질적인 국산화 추진

### ④ 직접생산 확인 방식 변경을 통한 국산화 유도

- 직접생산을 ‘국내에서 부가가치 일정비율 이상(예 : 30%)을 창출’하는 조건으로 확인하는 방식 변경 검토 ('24, 연구용역)
  - \* (현행) 시설, 인력, 공정 등 확인 → (개선) 부가가치 비율 충족 시 현장조사 생략
- 경쟁제품별 부가가치 비율을 산정하고, 이를 충족한 중소기업에게 ‘(가칭)부가가치 확인서’를 발급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간소화 (산업부 협업)

## V. 향후 추진계획

1. 공공구매시장 참여 중소기업 부담 완화	실행 수단	시기
· 직접생산 확인기준과 유사 법정인증 조사·개선	▶ 직접생산 기준 개정	'24.上
· 유사한 성격의 직접생산 조사를 합동으로 추진	▶ 조사 협업 추진	'24~
· 이중 제재 시 처분기간 감경	▶ 제재 시 감경 추진	'24.上
·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	▶ 판로법 개정	'24.上
· 상생협력제품·시범구매제품 평가 절차·기간 단축	▶ 평가 간소화 추진	'23.12
2.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효성 제고		
· 非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태조사	▶ 전 공공기관 조사	'23.12
· 중소기업 생산 제품으로 공공구매 인정	▶ 판로법 개정	'24~
· 중기제품 구매실적 확인 강화 및 과태료 부과	▶ 과태료 부과	'24.上
·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기관 집중 관리	▶ 대외공표, 평가 반영	'24.上
· 경쟁제도 성과 분석 및 지정 제외 검토	▶ 연구용역	'24~
3. 신제품의 공공구매시장 참여기회 확대		
· 진부화된 직접생산 확인기준 조사 및 최신화	▶ 직접생산 기준 개정	'24.1분기
· 경쟁제품 추천단체 확대	▶ 공공구매 운영요령 개정	'24.上
· 신제품의 경쟁제품 지정요건 완화	▶ 공공구매 운영요령 개정	'24.上
· 신제품 발굴·매칭 시스템 구축	▶ 공공구매망 개편	'23.12
· 공공기관 현장에서 신제품 실증 지원 및 확산	▶ 실증사업 추진	'24~
· 공공조달 참여 기술개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	▶ 공공구매론 보증 추진	'24~
4. 핵심부품의 국산제품 사용 유도		
· 부품 국산화 대상 경쟁제품 발굴	▶ 경쟁제품 중 선별	'23.12
· 부품 국산화 기업 인센티브 제공	▶ 운영요령 등 고시 개정	'24.1분기
· 부품 기업 정책 지원 및 완제품 기업과의 협업 강화	▶ 사업별 지원대상 추가	'24.上
· 부품 국산화 제품 구매 공공기관 평가 반영 및 포상	▶ 동반성장평가 반영 등	'24.上
· 부품 국산화 제품 우선 심사 평가기준 개선	▶ 계약이행능력심사 고시 개정	'24.下
·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부가가치 비율 도입 검토	▶ 연구용역	'24~



## 참고 1

##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요

### □ 공공구매제도 개요

중소기업제품 등 구매목표 비율제도		
※ 중소기업제품 50%, 기술개발제품 15%, 여성기업제품 5%, 장애인기업 1%, 창업기업 8%		
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('07~)	중소기업 우선조달 계약제도 ('12~)	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('06~)
<p>▶ 중기부가 지정한 제품*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 구매</p> <p>* 212개 제품(631개 세부품목)</p>	<p>▶ 기재부 고시금액(2.2억원) 미만의 물품·용역 구매시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</p> <p>* 1억원 미만은 소기업과 우선 계약</p>	<p>▶ 중기 기술개발제품*을 일정 비율(15%) 이상 우선적 구매</p> <p>* 성능인증, NEP-NET 등 13종</p>

### ○ 중소기업, 여성·장애인기업 등 기업 유형별로 구분

대 상	의무구매 비율	'22년 실적
중소기업 제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총 구매액(물품·용역·공사) 50% 이상</li> <li>* 시작 연도 : '06.1.1</li> </ul>	118.9조원 (총구매액의 75.7%)
기술개발제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% 이상</li> <li>* 시작 연도 : '06.1.1</li> </ul>	6.9조원 (중기물품 구매액의 18.6%)
여성기업제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물품·용역 : 각 구매총액 5% 이상</li> <li>공사 : 각 구매총액 3% 이상</li> <li>* 시작 연도 : '09.11.21</li> </ul>	13.9조원 (총구매액의 8.9%) * 물품 9.3%, 용역 7.7%, 공사 7.9%
장애인기업제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총 구매액 1% 이상</li> <li>* 시작 연도 : '16.7.28</li> </ul>	2.7조원 (총구매액 1.7%)
창업기업제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총 구매액 8% 이상</li> <li>* 시작 연도 : '21.1.1</li> </ul>	6.1조원 (총구매액의 3.9%)

### ○ 우선구매 대상별 구매실적

(단위 : 조원)

구 분	'17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
중소기업제품	92.2(74.8%)	94.0(76.2%)	105.0(78.7%)	116.0(79.8%)	119.7(77.6%)	118.9(75.7%)
기술개발제품	4.52(13.7%)	4.53(13.7%)	5.35(14.5%)	5.63(14.7%)	6.6(16.9%)	6.9(18.6%)
여성기업제품	9.91(8.0%)	10.58(8.6%)	11.9(8.8%)	12.52(8.6%)	12.8(8.3%)	13.9(8.9%)
장애인기업제품	1.54(1.2%)	1.76(1.4%)	2.1(1.6%)	2.33(1.6%)	2.4(1.6%)	2.7(1.7%)
창업기업제품	-	-	-	-	2.7(1.8%)	6.1(3.9%)



## 참고 2

##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상세 지원내용

구 분		지 원 내 용
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등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목표를 설정하고 의무구매하는 제도</li> <li>- 중소기업제품 : 총 구매액의 50% 이상</li> </ul>
중소 기업 자간  경쟁 제도	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품(경쟁제품)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자만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</li> <li>- 631개 세부제품 지정('22~'24년, 3년 주기로 지정)</li> </ul>
	공사용자재 직접구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사용 자재에 해당하는 경쟁제품(356개 세부제품)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(분리 발주) 공사 계약자에게 공급하는 제도</li> </ul>
	직접생산 확인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하청생산제품이나 단순구매·유통 제품을 납품할 수 없고, 직접 생산한 제품만 납품해야 하는 경쟁제품에 대해 관련 중소기업의 생산설비, 공정 등 직접생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</li> </ul>
	계약이행 능력심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기간 경쟁입찰 심사 시 입찰 가격과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심사하여 최저가 낙찰 방식을 배제하고 적정 가격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심사하는 제도</li> </ul>
기술 개발	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(성능인증, NEP-NET 등 13종)을 총구매액 15% 이상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제도</li> </ul>
지원 제도	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창업기업 등 조달 초보 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'시범구매제품'으로 선정하고(중기부), 해당 제품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에 구매 추천하는 제도</li> </ul>
상생 협력	혁신성장과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혁신 중소기업이 협력기업 생산설비를 활용하여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과제</li> </ul>
지원 제도	소재부품과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·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물품 내 외산 부품을 국내 부품으로 대체하는 과제</li> </ul>
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수요에 맞는 신제품의 발굴·매칭 및 실증(현장검증)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</li> <li>- 실증비 지원 : 재료비, 설치비 등 3천만원 한도 지원</li> </ul>

### 참고 3

### 중소기업제품 구매 법정비율 50% 미달성 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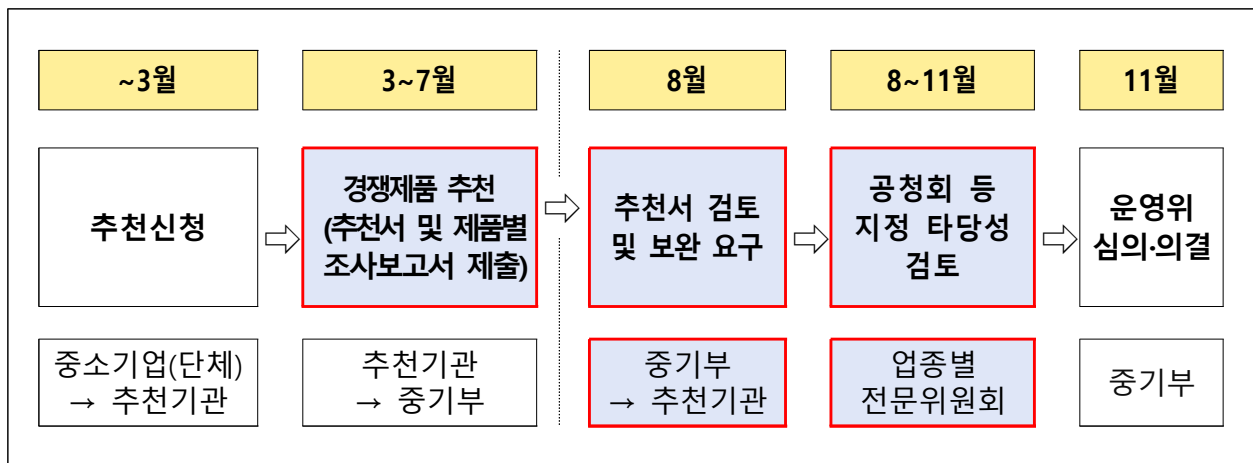
연번	공공기관명	'22년 계획	'22년 실적	비고
1	질 병 관 리 청	51%	12.2%	기관 특성상 구매목표비율(50%) 달성이 어려운 경우, 사전 협의 통해 조정이 가능하나 (판로법 시행령 제4조 3항), 사전 협의 없었음
2	국 방 과 학 연 구 소	50%	47.1%	
3	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	54%	46.7%	
4	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	50%	41.2%	
5	전 북 대 학 교 병 원	50%	49.9%	
6	한 국 석 유 공 사	50%	44.8%	
7	국 제 방 송 교 류 재 단	50%	49.0%	
8	충 청 남 도 홍 성 의 료 원	52.4%	9.5%	
9	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	57.5%	38.7%	
10	건 설 기 술 교 육 원	50.8%	38.3%	
11	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	61.7%	41.6%	
12	전 주 시 시 설 관 리 공 단	98.4%	38.4%	
13	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	63.5%	32.8%	
14	방 위 사 업 청	10.0%	21.1%	사전 협의 통해 목표 변경 (군수산업 특성상 주로 대기업인 방산업체를 통해 수의계약, 지명경쟁으로 조달)
15	한 국 은 행	42.8%	31.9%	사전 협의 통해 목표 변경 (국가 보안시설인 한국은행 통합 별관 건축공사 등으로 법정 구매율 달성 곤란)
16	새 만 금 개 발 청	15.0%	46.0%	사전 협의 통해 목표 변경 (대형 도로공사 등 대기업 수행공사가 많아 중소기업제품 법정 구매율 달성 곤란)
17	외 교 부	22.0%	39.7%	사전 협의 통해 목표 변경 (대테러보안 장비, 외교통신시스템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곤란한 구매예산 비중이 높음)

## 참고 4

##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개요

### □ 지정 절차

- (신청) 제품을 생산하는 단체 또는 직접 생산·제공하는 중소기업자 10개 이상이 연명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신청
- (추천)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에서 추천요건 및 지정 타당성을 검토하여 3년 주기로 중기부에 추천



### □ 운영위원회 심의·의결 : 정부 및 민간위원 15인 이내로 구성

\* 기재부·행안부·산업부·국토부·조달청 등 국장급 공무원, 산·학·연 전문가

### □ 지정 효력 : 지정 제품은 3년간 효력

\* '24년 추천·심의 → '25~'27년 3년간 지정

### □ 중기간 경제제품 공공기관 구매금액 및 참여기업 수('16~'22)

구분	'16	'17	'18	'19	'20	'21	'22
구매액(조원)	17.4	18.7	19.2	20.6	21.9	24.2	26.4
직생업체수(개)	28,124	26,391	28,703	28,497	32,285	32,396	37,561
제품(개)	204	204	204	212	212	213	212
품목(개)	784	781	783	614	611	611	631